

## 전체회의[전체회의 I]

## 기후변화 완화 및 대응을 위한 인권기반 접근법

## - 글로벌 이슈에 대한 지역 차원의 해결책

2022. 10. 10.(월) 17:30-19:30

주관: 광주광역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세계지방정부연합 인권위원회

## 배경

국가는 모든 수준에서 기후변화의 예측 가능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특히 취약계층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며 그들의 생명, 권리 및 존엄성을 보호를 위해 적응의 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인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전문에서는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반드시 인권에 대한 각자의 의무를 존중하고 증진을 위해 고려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도시활동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도시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특히, 교통과 건물이 가장 많은 배출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도시가 재생에너지원 사용을 늘리고, 청정에너지 생산기술 활용을 제고하고, 산업계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 및 유인책을 실행하는 프로젝트들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구의 삼중 위기”인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및 오염이 물, 위생, 식량, 보건, 주택, 자기결정권, 문화 및 개발에 대한 인권을 포함하여 다양한 인권에 대한 향유와 성취를 방해하고 있다. 또한, 2021년 10월 UN 인권이사회는 지구의 삼중 위기가 청정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환경에 대한 인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지리적 요건, 빈곤, 성별, 연령, 장애, 문화 또는 인종적 배경에 따라 이미 불리한 여건에 처한 특정 개인 및 지역사회는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적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더욱 많이 받는 불평등이 존재하기도 한다.



특히, 저지대 해안가에 위치한 지역사회, 툰드라와 북극 빙하, 건조한 지대, 복잡한 생태계와 주거 및 생활이 위협에 처한 지대에 위치한 지역사회는 기후변화로부터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인권에 대한 영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면서, 청정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환경에 대한 인권을 실현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 시키는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시는 기후변화 완화 및 대응을 위한 활동들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글로벌 위기상황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도시가 국가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때, 어떠한 해결책들이 있을까? 지구의 삼중위기에 대해 인권기반 대응으로부터 전 세계적 논의는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을까?

## 목표 및 주요 논의사항

본 세션에서는, 다음의 목표를 가지고 국제 전문가와 지방정부 연합 및 시민사회의 지방정부 대표 간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위한 활동에서 왜 인권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본다.
2. 지방정부의 역외적 의무를 강조하고 기후변화 완화 및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 수준의 인권기반 사례들을 살펴본다.
3. UNFCCC 당사국 총회와 같은 글로벌 논의, 선언, 및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지방정부 사례 및 관점 활용에 대해 고려한다.

